

배포 일시	2023. 2. 19.(일)		
담당 부서	물류정책관	책임자	과 장 박대순 (044-201-4006)
	첨단물류과	담당자	사무관 최은영 (044-201-4013) 주무관 이동우 (044-201-4008)
보도일시	2023년 2월 20일(월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2. 20.(월) 09:00 이후 보도 가능		

「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」 발표

-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한 3대 전략 마련 -

◆ 주요 추진전략

①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

- (1) **로봇 배송(26년)·드론 배송(27년) 조기 상용화** : 민·관 협의체 구성·운영,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추진('23~)
- (2) **AI 기반 전국 당일배송 체계 구축** : 도심 내 MFC 허용('23)
- (3) **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** : 자율주행 화물차, 지하물류 배송 체계, 콜드체인 모니터링 시스템 등 구현(~'27)

②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

- (1) **도심 물류 인프라 구축** :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추진
- (2) **글로벌 물류기지 조성** : GB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조성
- (3) **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** : 물류정보 통합 관리 및 민간 개방

③ 첨단 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

- (1) **ICT 기반 화물차 모니터링 강화** : 화물차 실시간 관제 구축('27)
- (2) **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** : '교통안전관리구역' 지정 추진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2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」을 발표하였다.
 - 정부는 작년 12월,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「新 성장4.0 전략」('22.12)을 발표하면서, 구체적인 도전 과제로 3대 분야(新기술, 新일상, 新시장) 15대 프로젝트를 선정한 바 있다.
 - 금번 안건은 新 일상 분야의 '차세대 물류'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으로, 現 정부 국정과제*의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담았다.
 - * 국정과제 28번 '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'
- 최근 ICT, AI 등 혁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, 물류산업도 첨단 기술이 융·복합되는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,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 및 우위 선점을 위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.
 - 물류산업도 물류창고의 자동화·무인화 등 첨단화가 진행 중이나, 노동 집약적 산업이라는 과거 이미지가 여전하고,
 - * 최고기술국 대비 기술수준(%): 미국(100), EU(96), 일본(88), 중국(80.5), 한국(78.5)
 - 국민들은 물류 서비스를 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이용하면서도, 물류시설 설치와 화물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.
- 정부는 국내외 정책여건을 고려하여, 우리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전략을 마련하였다.
 - 과감한 규제 개선과 민간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新 물류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,
 - 국민 체감도가 높은 新 물류 서비스를 조기에 구현하여,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고,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.
- 스마트 물류 인프라 구축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① 차세대 물류 서비스 조기 구현

① '26년 로봇 배송, '27년 드론 배송 조기 상용화

- 국민 체감도가 높은 무인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해, 민간의 기술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고,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 조성도 추진한다.
 - 또한, 무인배송 법제화와 안전기준 마련 등 신기술의 일상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조성한다.
- 물류뿐만 아니라, 플랫폼, IT 등 여러 분야의 기업이 참여하는 민·관 협의체(스마트 물류 발전협의체(가칭))를 구성('23.6)하고, 함께 머리를 맞대어 사업화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.

② AI 기반 당일배송 시스템 구축

- AI·빅데이터 기반 전국 초단시간 배송(30분~1시간) 구현을 위해,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(MFC)의 입지를 허용한다.
 - * **Micro Fulfillment Center** : 주문 수요를 예측, 재고 관리를 통해 주문 즉시 배송가능한 시설
- 또한, 민간의 낙후된 물류창고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, 민간의 첨단 물류기술 연구·개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.

③ 차세대 물류 기술 구현

- 자율주행 화물차가 주행 가능한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('23)하고 안전기준을 마련('24)하는 등 화물차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적극 지원한다.
- 또한, '27년까지 기존의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운송 시스템을 구축하고, 물류 전용 지하터널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.
- 콜드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온·습도 등 운송 환경에 민감한 화물을 모니터링하기 위해, 민간 기술 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.
 - *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내 신성장·원천기술에 '지능형 콜드체인 모니터링 기술' 포함('23)

②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네트워크 구축

① 도심지역 물류거점 조성

- 도심 내 물류용지 부족으로 인한 물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지역에도 도시첨단물류단지 등 물류 거점을 조성한다.
 - 또한,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가 사전에 생활 물류시설 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.
- 도심 인근지역에는 고속도로, 철도부지 등 유휴부지를 적극 활용하여 부족한 물류 인프라를 확충한다.

② 글로벌 물류기지 구축

- 글로벌 항공 물류허브 구축을 위해, 인천공항과 신공항에 첨단 물류인프라를 조성하고, 스마트 항공 화물조업체계*도 구축한다.
 - * 화물터미널에 자동화·디지털화 기법을 도입한 스마트 화물터미널로 순차적 개조, 자율주행 지상조업 차량, 웨어러블 조업 장비 도입 등 작업자 안전 및 생산성 향상
- 또한, 비수도권 국가 물류단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를 완화*하고, 국제 물류거점 조성을 위한 ‘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제도**’도 도입한다.
 - * 국가 지정 물류단지(비수도권)의 경우,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(‘23)
 - ** 각종 물류·제조시설을 시설 간 연계·효율성을 고려한 통합계획에 따라 구축하고, (가칭) 물류진흥특구를 도입하여 각종 규제 완화도 추진

③ 물류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

- 국내·외 물동량, 창고, 수출입 정보 등 산재되어 있는 물류 정보를 통합하여 육·해·공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고, 이를 민간에 개방하여 기업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.

③ 첨단기술 기반 물류 안전망 구축

① 화물차 안전관리 강화

- 국민이 화물차량의 통행에 안심할 수 있도록, 화물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통해 속도, 운행거리 등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화물차 안전관리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('27).

② 물류시설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

- 물류시설 인근 지역을 ‘교통안전관리구역’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(과속방지턱 등)을 설치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.
- 또한, 도심 내 화물·택배차가 안전하게 하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, 도로변에 물류 전용 조업공간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.
-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“국가 경제를 이끄는 핵심산업으로 성장한 물류산업이 우리나라의 초일류 국가 도약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”라며,
 - “물류산업의 새로운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, 우리 기업이 세계로 나아감과 동시에 국가 경제가 한층 더 성장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